

존 몰리뉴 칼럼
- 계급이란 무엇인가? 5면

박노자의 만감 - 러시아 제국주
의와 그루지야 6면

이라크인 의사 하이셈이 말하는 이라크 점령
알렉스 캘리니코스 - 미국 이라크 점령 전략 전환

이희수 교수가 말하는 레바논 파병의 부당성
왜 자이툰 주둔이 부시에게 필요한가

8면
2면
4~5면
8면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7면

홍근수목사의
〈맛불〉 창간 축하메시지 3면

15호 2006년 10월 14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맛불

값 600원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위험한 결과

북한 핵실험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관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의 지은 이 리언 시절은 며칠 전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는 것뿐이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은 예견된 순서였다. 핵보유 선언에도, 미사일 실험발사에도 미국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금융 제재를 지속하자 북한 당국은 결국 핵실험이라는 무시 못 할 카드

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5년 반 동안 부시

대북 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2002년까지 플루토늄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동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가 부시의 특사로 평양에 가 시비를 걸고 그 해 11월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제네바 합의 위반)함에 따라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리처드 펄 같은 자들은 “우리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쳐부셨다.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곤 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잠재적인 핵 공격 목표로 정해 놓았었다. 비핵화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은 명백한 핵비확산조약 위반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 북한에 노

골적 위협을 몇 년 동안 퍼부었다면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라고 제사를 지낸 셈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채 핵폭탄과 핵지뢰와 핵 미사일을 남한에 들여와, 비핵국인 북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부시 정부를 비롯해 남한·일본·중국 당국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에 “극단적인 환경 하에서 자위 목적, 즉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때, 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부시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지도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시켜 온 셈이다.

» 3면으로 이어짐





인용해도 됩니까?

“[차베스에 의해] 부시 대통령에 비유됨으로써 오히려 악마의 감정이 상했을 것 … 나는 부시가 국가와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엄청난 바보 대통령이라고 믿는다.”

－ 에라도르 대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좌파 후보 라파엘 코레아

“노벨평화상 받으러 오솔로에 갔더니 민주노총이 수상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고 하고,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했다더라. … 나는 나름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보답은 커녕 이렇게 나와 서운함이 있었다.”

－ 노동자 탄압과 구속이 ‘은혜를 베풀’ 것이었다는 전 대통령 김대중

““방우영 명예회장이 괴한이 내리찍은 벽돌장에 맞아 죽을 뻔한 테러[를 보며] … 테러의 원조는 빨갱이임을 재차 지적해 두는 바이다. … 국렬친북세력에게 조용히 무릎 꿇고 투항하여 노예로 전락했다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맞아 죽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망설이거나 주저할 여유도 겨를도 없다.”

－ 오버하는 <독립신문>

“월남에서도 사회가 아주 어수선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언론사의 사장부터 테러를 시작했다.”

－ 한나라당 전여욱

“노동부의[KTX 여승무원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 합법 도급이라는]발표가 있기 하루 전 날, 대통령이 텔레비전 대담에 나와서 비정규직의 숫자를 단 한 명도 줄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슴아파하였다.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었다.”

－ 배신감을 토로하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전략의 실패

알렉스 캘리니코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의 점처럼 보일 것”이라고 곧잘 말하곤 했다. 지난주에 바그다드에서 죽은 13명의 미군 병사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죽음은 이라크 주둔 미군 사상자의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의 일부다. 지난달[2006년 9월] 7백76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이 부상당했는데, 이것은 2004년 11월 미군의 팔루자 공격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의료와 장비의 진보를 고려하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병사들이 부상 후에도 살아남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의 부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8 대 1인데, 베트남 전쟁 때에는 3 대 1이었다.

부상

따라서 부상자 수는 전투의 격렬함을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이다. 10월 첫째 주에만 거의 3백여 명의 미군 병사들이 부상당했다.

이런 사상자 수의 급증은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실패했음을 반영한다. 2005년 11월에 부시는 그 전략을 “이라크인들이 앞에 나서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라크 꼭두각시 정부의 군대와 경찰 훈련이 끝났으므로 그들이 미군 대신 최전방 전투를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은 점차 미군 기지들로 철수할 것이고, 이라크 주둔 미군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략과 발맞추어 이라크 군대는 2006년 2월 사마라의 아

스카리아 사원에 대한 폭발물 공격 후 급증한 종파간 폭력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 때쯤 바그다드에서 미군 순찰 회수는 2005년 6월 하루 평균 3백60회에서 92회로 줄었다. 이라크 병사와 경찰이 가장 폭력적인 거리를 포함해서 바드다드 치안의 70퍼센트를 책임졌다.

그러나 종파간 살해는 계속 증가했다. 시아파나 수니파 민병대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암살부대들이 이슬람의 서로 다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라크 육군과 경찰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지지자들로 가득한데, 그 정당들은 그런 암살에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안바르 주(州)에서 전투에 참가한 한 해병대원과 바그다드에서 막 돌아온 한 육군 대위는 모두 지금 미군이 임박한 내전에서 서로 싸울 이라크인들을

훈련 중인 이라크 경찰
이라크 군대와 경찰로 미군을 대신하려는 전략은 실패했다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시 정부는 “이라크인들이 앞에 나서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7월에 바그다드 주둔 미군 병사 수는 갑절인 1만 4천2백 명으로 늘었다.

포기

서부의 중요한 주(州)인 안바르에 관한 비판적인 해병대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제2인자 지휘관인 피터 치아렐리 중장은 <뉴욕 타임스>에 자신은 다른 곳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주로 바그다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계획은 핵심 지역들에 집중해서 그 지역들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씩 되찾는 것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국가적 대사’인 양 야단법석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환영 논평(박용진 대변인)을 보냈다.

그러나 반기문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04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죽어갈 때조차 이라크 파병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은 유감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이 이라크 파병 재연장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전당적 사업으로 확정한 마당

에 당 대변인이 주류 언론의 호들갑에 영합한 것은 당혹스럽다.

애당초 ‘총장직 순환보임 관행 반대’ 입장을 내고 폴란드 전 대통령 알렉산데르 크바니에프스키를 후보로 거명하는 등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출마를 공공연히 반대하던 미국이 지난 7월 이후 확실한 지지로 돌아선 것이 반기문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크리스토퍼 힐과 미국의 유엔 대사 존 볼튼이 공공연히 반기문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부시는 지난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 직전 반기문과 면담을 나

누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등 미국 내 일부 언론의 반기문 지지 ‘재고’ 요구에도 크리스토퍼 힐이 진화에 나섰다.

물론 여기에는 아시아 출신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인도를 견제하는 중국이나 친미 노선을 걷는 폴란드에 반대하는 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의 입김도 작용했다.

김선일

그러나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부터 최근 레바논 파병 문제까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아시아의 핵심 우방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포석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테러 대응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고 한 부시의 인사는 현재 한미동맹의 중심축이 미국의 대중동 전략을 놓고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며칠 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레바논 팀의 일원이 되겠다고 했다. … 이라크에 한국군을 유지하는 노무

이다. 그로 인한 격렬한 전투 때문에 미군 사상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펜런에 따르면, “바그다드 치안 유지 계획은 이라크인들이 내전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던 럽스펠드 독트린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1만 4천2백 명의 미군과 그들을 보조하는 미덥지 못한 이라크인 부대들이 무기로 가득 찬 인구 7백만 명의 도시에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한 국방부 관리의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바그다드 치안 유지 계획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권력자들에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부시는 다음 달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공화당의 노련한 해결사 제임스 베이커가 단장인 ‘이라크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며 이 문제가 묻히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10월 6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지도자인 존 워너는 이라크 상황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이런 압력들이 효과를 낼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한다. 밥 우드워드의 새 책 <<부정하는 국가>>(State of Denial)에서 폭로된 사실, 즉 부시와 부통령 딕 체니가 헨리 키신저를 빈번하게 만났다는 것은 별로 위안이 되지 못한다. 보아하니 그 늙은 전범[키신저]은 그 동안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 전략은 승리뿐”이라고 말한 것이 틀림없다. 베트남 전쟁 때 그랬듯이, 미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라크에서 나갈 것 같다.

미국의 대중동전략 지지에 대한 선물

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의 반기문 지지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레바논 전쟁을 일관되게 지지한 한국에게 보내는 부시의 답례인 듯하다. 심지어 반기문을 마뜩찮아 하던 영국도 미국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가 사무총장으로 확정된다면 미국의 전쟁을 도와주기 위한 그의 노력이 임기 내내 계속될 공산이 크다. 그를 세계 반전 운동의 공적(公敵) 명단에 올리는 것은 한국 반전운동의 몫이다.

장호중

대북 제재 강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 1면에서 이어짐

북한 핵실험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거나 핵 보유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이 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내뱉어 놓은 험악한 말들 때문이라도 부시 정부는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렛대

첫째, 미국은 이라크에 발목이 묶인 데다 이란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해도 대북 공격까지 추진할 만큼은 아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계산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려 해도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1994년에 주한미군 총사령관이었던 게리릭은 북한 핵시설 공격시 “미국인 8~10만 명을 포함해 1백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1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드는]” 전면전을 부를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중국과 남한 정부의 의견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는 동의하겠지만(수위에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군사 공격은 지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미국 군대가 압록강 근처까지 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대규모 파괴를 각오해야 하

는데 그것은 이른 시일 안에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일 수 있다.

2005년에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할 때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10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운이 조금 좋다면 폭격 후 두 달 안에 피폭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15 킬로미터에 있는 생물의 80퍼센트가 사망하고, 낙진은 서울을 포함해 최대 1천4백 킬로미터까지 확산된다.

미국이 북한을 너무 거칠게 몰아붙일 경우 남한은 중국과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 브레진스키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전 해체 이후 늘 이 가능성을 염려해 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위협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동시에, 사태를 너무 악화시켜서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미국의 군사대응을 쉽지 않게 만드는 조건으로 다수파가 된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부는 우선 유엔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지난 5년 반 동안 통일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시 정부가 며칠 만에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을 것 같지는 않다.

남한 진보진영은 대북 제재 강화 자체가 사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대응은 물론이고 유엔 제재에도 반대해야 한다. 남한 정부의 유엔 제재 지지 방침에 힘을 실어 줘서는 안 된다. 제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만 증대시킬 뿐이다.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즉각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다.

김하영

지난 6월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용감한 방패’ 훈련

위험한 게임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군사 대응이 없다 해도 북한 핵실험은 평화와 안정은커녕 동북아 긴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한과 대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는 핵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 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핵실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불가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북아시아 민중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일 뿐이다. 또한 남한과 일본 등지의 민중운동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핵 공포의 균형이 평화와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인류는 핵전쟁 코앞까지 갔었다. 4년 전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핵무기로 상대 국가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 될 뿐이다.

〈맞불〉 창간을 축하하며

〈다함께〉가 〈맞불〉로 발전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말이 발전이지 새 창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선 〈맞불〉이 주간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치〉라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주간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깥입니다. 소재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간지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맞불〉이 더욱 세련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 〈다함께〉는 선전물이나 유인물 같은 성격의 것이었지만, 〈맞불〉은 더욱 세련된 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불〉의 관심 분야도 다양해져서 경제 문제도 광범하게 다루어서 기쁩니다.

전에는 전쟁 일변도로만 다룬 감이 없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맞불〉은 우리 시야를 좀더 넓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근수 목사



이희수 교수가 레바논 파병의 부당성을 말한다

부시 정부가 벌여 온 “테러와의 전쟁”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테러와의 전쟁”은 한마디로 문명 범죄입니다. 그것은 네오콘들이 중심이 돼 오래 전부터 마련해 온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전략적 이해 관계로 볼 때 결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석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와 유전 밀집 지대죠.

바로 이 카스피해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지배가 필요했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부시 정부는] 미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이용해 기다렸다는 듯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카스피해 인근의 모든 요충지에 미군 군사기지를 지어 놓았습니다. 9·11 테러라고 하는 절대적 기회를 틈타 자기들이 짜놓은 침략 시나리오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라크를 공격·점령한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그런데 카스피해와 중동 석유 둘 모두를 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손에 넣음으로써 미국의 구상을 완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함으로써 시리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나아가겠다는 구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헤즈볼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게 인류 역사의 입장에서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자이툰 주둔에 대한 커다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가치의 틀까지도 짓밟아 버린 채 한 주권 국가를 침략한 21세기의 가장 야만적 전쟁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내세워 참가했다는 것은 썩기 어려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라크에 적대적이고 이라크 침략을 지지했던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서, 전쟁 피해도 전무한 그 지역에 가서, 한국군이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평화 재건과 전쟁 피해 복구를 한다는 게 완전히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 재연장을 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일 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 이란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거점이 쿠르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중동 지배 전략에 완전히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는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레바논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게 이뤄졌지만, 유엔결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소위 ‘공격적 침략’만 못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도 ‘테러 거점 파괴를 위한 방어적 공격’이라는 논리를 썼거든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전제조건으로 정해 뒀는데, 헤즈볼라는 절대 무장 해제를

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도 군대를 보냈는데, 유엔 결의안에 따른 레바논 평화유지군을 왜 못 보내느냐’ 하는 식의 논리가 상당히 강한데, 이걸 결국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얼마나 끔찍한 악순환을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겁니다.

게다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까지 낸 나라의 국제적 위상 같은 것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레바논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었죠. 그런데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유엔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다시 침공해 왔을 때 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 수 있는가’, 또,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 폭격을 할 때 우리가 지대공 미사일을 쏘서 이스라엘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무장해제를 거부하는 헤즈볼라를 상대로 우리가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투 부대가 아니라 평화 재건 부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레바논 침공 때도 다 비무장 유엔군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나라’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와 터키가 가

장 적극적으로 파병하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해 온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지역 해게모니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는 터키도 오스만 제국 시절에 수백 년 간 그 지역을 식민 지배해 왔죠. 그런데 이런 터키조차도 지상군은 안 보내요, 해군을 보내지. 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레바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유지군이 아닙니다. 음식과 의약품이 필요한 이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중동의 위기와 참상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 뒤 그 전보다 테러 발생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여론이 이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모으고 미국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차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일극 체제와 수퍼 파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계 여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NGO 운동도 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보고 세계 NGO와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 정리 김용민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⑧

계급이란 무엇인가?

존 몰리뉴

지난 번 칼럼에서 보았듯이, 맑스의 역사이론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이 결정적 구실을 한다. 맑스는 계급투쟁이 역사의 주요 동력이라고 보았고, 계급투쟁이라는 수단에 의해 하나의 생산양식이 다른 생산양식으로, 예컨대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또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보았다. 그런데 계급이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졌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계급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언론과 각종 문헌, 일상생활에서 아주 폭넓게 쓰인다. 왜냐하면 부(富)의 소유 정도나 라이프스타일, 각종 기회의 편차가 아주 큰 사람들의 층(層)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지배자들로서는 대중, 특히 노동 대중이 계급에 대한 분명한 인식, 다시 말해 계급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래서 1백 년 넘게 지배계급은 기꺼이 학자들(특히 사회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돈을 대주며 다양한 계급 이론들과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했다. 그들 지배계급은 이런 이론들이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은 그 이론의 내용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 조건이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맑스주의 계급론을 ‘논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이런 이데올로기적 미혹의 주된 전략은 계급의 본질을 주관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논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지식인이자 20세기 초의 사회학자인 맑스 배버는 사회적 행동의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 계급이 아니라 ‘지위’와 ‘지위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가 말하는 지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개인의 위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언뜻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처럼 보이는 정부 통계나 사회학 통계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계급을 직업으로 규정할 때조차 – 예컨대, 교사는 중간계급, 정비사는 노동계급 하는 식으로 – 직업 분류는 지위라는 막연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계급을 주관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계급 개념이 쉽사리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계급 개념이 달라진다. 또, 이제 계급 분열은 사라졌고 더는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계급의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 따위로 쉽게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달리, 맑스주의는 비록 계급의식을 분명히 증시하지만 계급 분열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계급 분열을 인식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사회 구조 속에 계급 분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맑스는 계급 분열이 사회의 생산관계에서 비롯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흔히 이것을 표현하는 문구가 “계급은 생산수단과 맺고 있는 관계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흔히 “그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문제다”라는 말이 덧붙여진다. 비록 이 공식이 대체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때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노예 소유주들, 봉건 지주들, 자본가들은 모두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지만 서로 다른 세 계급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 삼성의 중간관리자나 작업 현장의 노동자는 모두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둘은 똑같은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

착취

맑스주의 계급론을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요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의 생산관계는 하나의 전체인 특정 생산체제를 이룬다는 것과, 계급은 이 체제 전체에서 그것이 하는 구실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다. 개별적 경우(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체제 전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급은 사람과 사물(생산수단 토지·기계·공장 등) 사이의 관계 문제일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문제이기도 하다. 즉, 계급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셋째, 그런 충돌의 원인은 시기십이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심지어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착취적 생산관계, 즉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노동에서 잉여(이윤)를 체계적으로 수취하는 것 때문이다. 계급 투쟁은 생산과정 상의 착취에서 비롯하고, 거기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

부르주아지의 온갖 자유주의적·사회학적 설명들과 맑스주의 계급론의 차이점이자 그런 설명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착취 개념(다음 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이다. 착취 때문에 이해관계의 객관적 충돌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을 둘러싸고, 나중에 주택, 보건의료, 교육, 법과 질서, 외교 정책(전쟁이나 복지나) 등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진다.

이런 분석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일부 중요한 지역들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모든 선진국들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계급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상층에는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이 있다. 그들은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

들에게서 나오는 이윤으로 살아간다. 지배계급의 성원이 모두 몸소 고용과 이윤 축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그런 일에 매여 있고 그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물론, 일부 고위 정치인들과 국가 관리들은 몸소 관여한다.

지배계급의 반대편에는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계급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고 자본가 계급에게 착취당한다. 노동계급에는 육체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모두 포함된다. 향만 노동자나 자동차 노동자뿐 아니라 간호사나 교사도 노동계급인 것이다. 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일부이다. 그들이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든 콜센터나 대학에서 일하든 그것은 상관 없다.

이 양대 계급 사이에는 흔히 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중간 계층들이 있다. 중간계급의 상층은 그 처지가 점차 지배계급을 닮아가고 하층은 점차 노동계급을 닮아간다. 중간계급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둘 다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다. 한편에는 소상공인들, 즉 썸피부르주아지가 있다. 그들은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을 몇 명 고용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는 관리자들이 있다. 관리자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임금이 나 봉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받는 보수는 여느 노동자들이 받는 것처럼 임금이 아니다. 즉, 그들은 착취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노동자들의 착취를 감독하고 실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그런 관리자들은 사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국가관료 집단에도 있다.

투쟁

현대 사회의 기본적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이다. 지배계급은 중간계급 없이는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간계급도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양대 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더 강력한 ‘인력’(인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저개발국에는 또 다른 주요 계급인 농민이 있다. 그들은 생산과 정치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심지어 농민이 여전히 다수인 곳에서조차 결정적인 것은 대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리고 명백히 세계 규모에서는 국제 부르주아지와 국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이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 문학인류학과 교수이자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중동과 이슬람 전문가다. 그는 자이툰 파병에 반대해 왔고, 최근에는 레바논 파병 시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왔다. 저서로는 《이슬람》(청아출판사) 등이 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군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박노자의 만감

요즘 국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두려움부터 느낀다. 최근의 러시아와 그루지야 사태의 외파적인 윤곽은, 간접 혐의로 몇 명의 러시아 장교를 며칠간 구속한 그루지야의 “적대 행위”에 반응해 러시아가 그루지야와 일체의 교통·무역·재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일종의 보이콧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미·러 간의 유라시아에서 암투가 노정된 셈이다. 그루지야의 친미적인 현 정권이 nato 가입 의사를 내비치자 러시아가 장교의 구속을 빌미 삼아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이다.

지금의 순위는 경제 전쟁이고 바로 다음 순위는 진짜 전쟁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직은 전쟁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재식민화에 실패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루지야 확보를 위한 대리전까지 치를 만한 여유가 당장 없다. 북한에 대해서도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무기로 칠 여유 역시 이라크 독립군 덕분에 생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 유라시아 자원 확보 전쟁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의사와 여력이 생긴다면 아마도 지금의 러시아는 7년 전의 유고슬라비아 사태 때와 달리 아예 응전하지 않을가 싶다. 그 정도로 보안기관 출신 지배 그룹의 통제 체제가 그 나름의 안정성을 취한

것이고, 또 그 정도로 군수복합체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루지야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곧 미·일과 중·러 블록 사이의 전면적인 직접적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충돌의 장기적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 양쪽이 대치 중인 한반도에서도 사태가 가일층 긴장될 것이다. 그런데 폭탄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루지야의 무고한 백성이 고통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루지야 출신의 약 1백만 명이 러시아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광풍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다.

광풍

NL계통에 속하는 분들은 대개 이북 정권을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중·러 블록에 대해 좀 너그러운 듯하다. 물론 미·일 블록에 비하면 유라시아의 영토 제국형 야수들은 아직 약체이고, 이라크라는 외부 지역의 재식민화를 도모하는 미국의 “웅비”와 달리 주로 영토 내의 민족적·종교적 타자(체첸·위구르 등)의 억압 및 말살이라는 훨씬 더 제한된 과제에 집중할 뿐이다. 즉, 미국과 달리 자국 영토 밖으로 아직도 군사적 팽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니어 제국주의자”들을 긍정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듯하다. 이제 그루지야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듯한 태세를 갖추는 러시아도 그렇지만, 티베트와 백두산 지구의 “개발”에 힘쓰며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차후 이북 영토의 인수인계의 이념적 기반인 “동북공정”까지 진행하는 등 “제국적 발흥” 준비를 갖추는 듯한 중국도 미국보다 약체라 해서 좋게 볼 세력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논할 것도 없지만, “민주”의 외피가 있는 러시아만 해도 그 관련들이 주민들을 다루는 법(거리에서의 불심검문 등)을 보면 미·일에 비해서도 거의 야만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단·중기적으로 이 “젊은 야수”들이 당장 세계 체제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없겠지만, 차후에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크게 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다. 그러기에 국내 언론들이 대체로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그루지야 소식은 재음미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최근 연구차 일본에 간 박노자 교수가 〈맞불〉 김하영 기자와 일본 우경화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인터뷰했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 실지 못하니, 〈맞불〉 웹사이트를 보시오.

Forums

고려대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10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추후공지
문의: 010-2752-2003

이화여대

자본주의와 전쟁
10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생문화관 501-2호
문의: 010-2263-1106

성공회대

아베 내각 출범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10월 11일(수) 오후 7시
장소: 새천년관 7204호
문의: 011-9825-9753

대학 맑스주의 포럼

단국대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10월 1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이부학관 105호
문의: 010-3122-1905

연세대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10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문의: 017-362-7077

시립대

한미FTA,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10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전농관 210호
문의: 011-9347-1075

지역 사회 포럼

중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 투쟁
10월 18일(수) 오후 8시
장소: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 대학맑스주의포럼과 지역사회포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레바논 파병 지지는 치명적 실수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내 의견그룹
‘비판적 좌파’의 회원들인 필 러시틴,
파비오 루지어로, 안젤라 라나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이탈리아 좌파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주요 급진좌파 정당인 재건공산당(리폰다찌오네 꼬무니스타)은 현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로마노 프로디가 총리를, 민주좌파당의 마시모 달레마가 외무장관을 맡고 있는 현 정부는 이탈리아군 3천 명을 유엔(UN)군의 일부로 레바논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반전 운동 안에 심각하고 가장 큰 위기를 낳았다.

2003년 2월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 3백만 명을 동원했던 이탈리아 반전 운동은 지난주 토요일[9월 30일] 모든 전선에서의 이탈리아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로마 시위에 겨우 1천 명 남짓을 동원하는 수준으로 쇠퇴했다.

시위는 대개 소수를 대표하는 작은 단체들이 주도했다. 대형 노조의 지도자들은 소속 조합원들의 반발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시위 참가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는 재건공산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와 집회가 많이 벌어졌지만, 이 시위들은 지역 수준에서 조직됐다.

또, 이 위기는 운동 내에서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위

‘평화원탁회의’(Tavola della Pace)는 이탈리아 전역의 수많은 지자체와 가톨릭 반전 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다. 8월에 이 단체는 아시시에서 ‘UN으로 가자’(Forza ONU)고 적힌 배너를 들고 이탈리아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부로 레바논에 파병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가톨릭 반전 운동 안에서 이 입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 10월에도 똑같은 시위를 벌이려는 움직임은 취소됐다.

그리고 정부가 레바논 파병을 결정했을 때 그런 조치를 맹렬히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좌파 신부인 알렉스 차노텔리 같은 운동 내 저명 인사들이 이 성명에 서명했다.

차노텔리는 나폴리 등지에서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성공적인 운동에 참가해 왔다. 현재 이 성명을 조직한 사람들은 10월과 11월의 동원을 위해 반전 운동을 재조직하려 애쓰고 있다.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은 아마도 재건공산당일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반전·반자본주의 시위들의 중추 구

실을 해 왔다.

재건공산당은 [현 중도좌파] 정부에 참가한 뒤 급격히 우경화해 왔다. 재건공산당 리더인 파우스토 베르티노티는 하원 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신(新) 파시스트인 ‘국민동맹’의 청년단체 ‘아치오네 지오바네’(Azione Giovane)의 총회에 공식 참가함으로써 당 안팎에 엄청난 논쟁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제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총회에 참석했다고 둘러댔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 단체들이 인종차별적·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주민과 극좌파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했다. 따라서 베르티노티의 처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재건공산당은 정부의 레바논 파병 결정에 기여해 왔다.

‘비판적 좌파’로 조직된 재건공산당 내 좌파는 이 모든 사안들에 강력히 반대해

야 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이탈리아군의 임무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싼 7월 국회 표결을 앞두고, ‘비판적 좌파’에 소속돼 있거나 그와 가까운 상·하원 의원들이 반정부 진영을 대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재건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은 당이 반대표를 던지길 원치 않으며 중도좌파의 주류 안에서 압력을 가하는 정도로 스스로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 대한 비판이 심지어 당내 다수 의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비판이 가장 고조됐을 때 비판 세력은 로마에서 열린 당대회에 6백 명의 저명한 활동가들을 결집시켰다. 외과의사이자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 NGO’의 지도적 인물인 지노 스트라다는 비판 운동을 지지하고 이탈리아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굴복

이 사안을 둘러싼 첫 투표에서 반대 진영의 상·하원 의원들은 파병 활동 예산 지원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재투표가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게 되자 반대파 의원들은 굴복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탈리아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정부의 위기를 기꺼이 초래할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라

고 주장했다.

똑같은 문제가 레바논을 둘러싸고 되풀이됐다. ‘비판적 좌파’의 상·하원 의원들은 이 문제에 기권할 것이라고, 즉 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낭독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겠지만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핑계는 재건공산당 내부 관계들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반대표는 당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공장 노동자들에 기반을 둔 ‘비판적 좌파’의 주요 분파는 재건공산당의 분열 가능성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의 작품 제목처럼,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운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파병]에 대한 우유부단한 반대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반대 운동을 건설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건공산당 내의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조만간 분열이 불가피해진다면, 우리는 이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런 쟁점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말 벨라리아에서 열리는 ‘비판적 좌파’의 전국 세미나에서 우리는 운동이 직면한 문제들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번역 김용민

파우스토 베르티노티



하이셈은 현재 이라크 적신월사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다.

이라크인 의사 하이셈 인터뷰

“이라크 재건에 군인은 필요 없습니다”

행히도, 미군은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을 이라크 정부 인사로 임명하려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인들의 정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죠.

“미국은 저항 운동이라는 것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에는 진정한 저항 운동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미군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고 있고,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하는 것과 비슷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인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를 지키고 해방시키려는 의지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갈등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갈등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쟁 후에 미국도 이간질을 생각했고 시도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과 증오가 있습니다.

해방

“어떤 사람들은 처지가 너무 절망적인 나머지 미군의 돈을 받아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미군은 어떤 수니파 사람에게 돈을 주고는 시아파 사람을 해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정당들이 권력을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 혼란을 일으켜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라크인들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란은 이

라크와 다릅니다. 이란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지 부시가 어떤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시가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라크인들은 크게 분노할 것이고,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레바논 전쟁 때 이라크인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고민을 잊고, 레바논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레바논을 지원하기 위한 의용군을 모집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를 재건하는 데 군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라크에 와서 이라크인들과 함께 학교와 병원을 짓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고, 이라크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돌게 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저 파괴하는 것을 잘할 뿐입니다.”

인터뷰 · 정리 김용욱

왜 부시에게 자이툰 주둔이 중요한가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재연장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우겨왔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의 발언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밀실 야합했다는 게 드러났다.

회담 결과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주한 미 대사 버시바우도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라는 기본 임무를 넘어서 더 큰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지금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라크 사태가 진전중”이라고 했지만, 지난 5일 그가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저항세력의 로켓 공격 때문에 바그다드 공항에 착륙하지도 못하고 45분간 떠돌아야 했다.

부시의 일방주의도 한계를 드러냈다.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는 “9·11 이후 미국의 외교는 테러리스트보다는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 부시는 유엔을 무시하고 프랑스더러 ‘옛 유럽’이라고 비웃으며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프랑스를 다시 끌어들이려 했고, 이란 핵문제를 다룰 때도 유엔에서 다른 열강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자이툰의 주둔 연장은 부시에게는 매우 고마운 일이다. 표면상 자이툰이 이라크에서 “뜨개질 가르치기” 따위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이툰은 “테러와의 전쟁”이 맞고 있는 정당성 위기를 가리는 구실을 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자이툰이 “다국적군에 포함돼 있는 것 자체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전 때도 미국은 ‘더 많은 깃발 정책’(파병 규모와 무관하게 많은 국가의 참전 유도하기)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려 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이라크 점령 참가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의 ‘광범함’을 과시하게 할 수 있다. 또, 자이툰이 없었다면 가뜩이나 병력 동원이 힘든 미국은 아르빌에도 군대를 보내야 했을 것이다.

자이툰이 ‘삽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자이툰은 UNAMI(유엔이라크재건지원기구) 아르빌 지사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게다가 자이툰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최근 레바논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도 이란 공격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라크 파병이 “경제적 실리가 없기 때문에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

은 정확한 반박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심지어 자이툰이 기업 진출에 “족쇄”가 된다고 한다.

본전

그러나 한국 기업은 열과 성을 다해 자이툰 파병을 찬성해 왔다. 전경련은 김선일 씨의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파병에 따른 ‘실익’이 2008년까지 1백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 적이 있다.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라크 시장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며, “기회 포착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정부도 슬슬 본전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6월 한미 상무에너지장관 회담에서는 “이라크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참여”를 협의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플랜트 수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진출을 안

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이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더 근본적으로, 파병은 일부 기업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12개 나라에 군대를 파병했지만 이들 중에는 즉각적 ‘실익’과 무관한 곳도 많다. 하나의 계급으로서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편승해 한국 자본주의 전체가 세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이툰이 이라크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이 팬시리 주둔하고 있으니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은 뒤집으면 자이툰이 별 해악을 끼치지 않으니 그냥 거기 남아 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자이툰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지배자들 전체에 대해 갖는 정치적 역할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이툰 철군의 필요성에도 다시금 주의를 돌리게 할 것이다.

한규한

2004년 자이툰을 방문한 린스펠드